
<공동논평>이명박 정부의 이중적 인권외교를 개탄한다

2008년 12월 10일 오후 2:22

<논평>이명박 정부의 이중적 인권외교를 개탄한다

정부는 지난 12월 4일, 유엔 총회에서 대북 인권결의안에는 찬성하면서 이란 인권 결의안에는 기권했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면서 "인권문제는 여타 다른 사안과 분리해서 인권 자체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차원에서 계속 추구"한다며 보편성의 논리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란 인권결의안에 기권하면서는 "국익차원에서 기권했다"는 국익론을 내세웠다.

이러한 정부의 이중잣대는 인권문제에 대한 기본입장과 철학이 없음을 또한번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석유 확보를 비롯한 자원외교를 위한 국익은 생각하면서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국익 훼손에 대해서 고려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태도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인권의 보편성을 운운하는 것보다 북한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높이기 위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솔직한 입장을 밝히는 게 낫겠다.

최근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게다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실효성도 없는 북한인권법을 입법 발의하여 남북관계의 추가적인 악화를 자초하려고 하고 있다. 더구나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에는 대북 전단지 살포, 단파 라디오 보급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빼라 살포'를 지원하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한국의 인권 상황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라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반인권적인 법률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인권의 보편성을 위배하고 인권에 이중적인 기준을 들이댔으로써 '정치적인 접근'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인권의 관점 자체가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에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정부와 여당은 실효도 없고 남북관계만 악화시키는 대북 인권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너나 잘해'라는 편견을 듣지 않기 위해 한국의 인권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과 차분히 인권대화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정부의 주장하는 대로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 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12월 10일

평화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